



서울시 7급 행정학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는 예년의 서울시 7급 문제에 비해서는 쉽고 분명한 출처를 가진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학 합격선은 90점 이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문제씩 개별문제들을 살펴보면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면 BOX형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되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통해 난도를 조절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7급 문제는 최근 공무원 시험문제에서 지엽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심해지면서 난도 조절을 불분명한 출처에서 출제하는, 이른바 ‘불의타’ 문제로 하기 보다는 이처럼 기본적인 주제에서 지문의 길이를 늘이거나 지문 개수를 늘려 정확한 이해도를 테스트함으로써 변별력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출제의 경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7급 시험이 끝이 아닌 만큼 냉정하게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시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신용한 드림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6	재무행정론	3
정책론	2	정보화사회와 행정	2
조직론	4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1	지방자치론	1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2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4	1	3	8	-	1	3

【해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성과지향성을 제고하는 제도’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ㄱ [X]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은 양성평등의 인식제고와 실질적 예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다.
 ㄴ, ㄷ [X] 국민감시제도와 예산성과금 지급, 재정정보의 연1회 이상 공개 의무화 등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X]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진출입을 규정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성과지향성 제고방안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02

▶ ④

| 말 바꾸기 |

0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①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지표로서의 업무단위가 중간산출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찰의 순찰시간이 치안 유지의 확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② [O]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층에게 유용한 행정관리 수단이 된다.
 ③ [O] 사업별로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회가 용이하다.
 ④ [O]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84~685

▶ ①

| 법령 문제 |

04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다.
-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① [O] 우리나라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 정당공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X] 우리나라의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1선거구에 1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이다.
- ③ [X]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1선거구에 2~4명의 당선자를 내는 중선거구제이다.
- ④ [X]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므로 후보자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ummary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소선거구	중선거구
최소정수	22인(지역구 19인 / 비례 3인)	7인(지역구 6인 / 비례 1인)
정당공천제	○	○
비례대표제	○	○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25, 126



| 말 바꾸기 |

0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해설】
- ㄱ [O]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비용이 포함된 능률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이 추구될 경우 희생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 ㄴ [O]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인 '대외적 민주성'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의 측면에서의 '대내적 민주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 ㄷ [X] 절차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절차적 합리성은 행동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가 인간의 인지능력과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를 의미한다.
 - ㄹ [O] 투명성은 정보공개와 소극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정보의 용이한 접근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념이다.
 - ㅁ [X] 제도적 책임성이 아닌 자율적 책임성(내재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 올바른 지문

- ㄷ.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ㅁ. 자율적 책임성(내재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98, 99, 101, 104, 746

▶ ③

| 개념 + 말바꾸기 |

06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원리 도입
-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 ① ㄱ, ㄴ, ㅂ
- ② ㄴ, ㄹ,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ㄷ, ㄹ, ㅂ

- 【해설】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에서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촉진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3. 경쟁적 정부, 4. 사명지향적 정부, 5. 성과 지향적 정부, 6. 고객 지향적 정부, 7. 기업가적 정부,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9. 분권적 정부, 10. 시장 지향적 정부
- ㄱ [X] 성과지향적 정부 :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 ㄴ [O] 분권적 정부 :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 ㄷ [X] 촉진적 정부 :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노젓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 ㄹ [O] 경쟁적 정부 :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ㅁ [O] 사명지향적 정부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ㅂ [X]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올바른 지문

- ㄱ.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 ㄴ.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수행
- ㄷ.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보다는 사고 예방에 주력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57



| 개념 + 말 바꾸기 |

07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 【해설】
- ① [X]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업구조와 계층제를 강조한다.
 - ② [O] 베버는 법적·합리적 권위에 입각한 근대적 관료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X] 이념형(ideal type)은 최고라든가 탁월하다든가 어떤 도덕적 이상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석적으로 도출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④ [X] 관료제는 문서화된 법규와 전문직업적 판단을 모두 중시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업구조와 계층제를 강조한다.
- ③ 추상적 개념으로서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 ④ 문서화된 법규와 전문직업적 판단을 중시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44, 345



| 개념 문제 |

08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점을 찾는다.
-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 【해설】
- ② [X] 준거인물은 배울점을 찾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하여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인물이다.
 - ①, ③, ④ [O]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를 낮추거나, 보상(산출)을 요구하거나 준거인물(비교하는 대상인물)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준거인물을 변경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00



| 개념 + 말 바꾸기

09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 ③ [O] 메타정책결정단계(상위정책결정단계, meta-policy making)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이다. 결정의 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올바른 지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55

▶ ③

| 개념 + 말 바꾸기 |

10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형승계 :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 ② 부분적 종결 :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 ③ 정책통합 :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 ④ 우발적 승계 :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해설】 ① [O] 선형적 승계는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영역에서 기존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② [X] 부분적 종결은 어떤 사업의 자원 투입이나 정책 산출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는 '정책분할'이다.
 ③ [O] 정책통합은 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② 정책분할 :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08

▶ ②

11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은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해설] 보기의 내용은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X이론의 인간관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안전을 원하고 변동에 저항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 ①, ③, ④ **[O]** X이론의 관리전략은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엄격한 감독과 통제제도의 확립,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고층적 조직 구조 등이 관리전략에 해당한다.
- ② **[X]**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Y이론의 관리전략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Y이론의 관리전략은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summary | X·Y 인간관의 관리전략

구 분	X이론(전통적 관리체제의 정당화)	Y이론(새로운 관리체제를 뒷받침)
관리 전략	'유연한 접근(당근)' 과 '강경한 접근(채찍)' 을 교환적으로 활용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③ 엄격한 감독과 통제제도의 확립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⑤ 고층적 조직구조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integration)을 추구 ①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②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③ 목표에 의한 관리 ④ 직무확장(job enlargement) ⑤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⑥ 자체평가제도의 활성화 ⑦ 평면적 조직구조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93



1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포테믹스(infordemics)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O] 인포데믹스(infordemics)는 근거 없는 각종 루머들이 IT 기기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정치, 경제, 안보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O]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의사를 확인하기 용이해지므로 의사결정이 보다 양극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집단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다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격해지는 현상이다.
 ㄷ [O]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터넷은 역설적으로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한 노출을 저해할 수 있다.
 ㄹ [O]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13 ▶ ④

| 제도 및 이론비교 |

1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안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 ② 미국의 'challenge gov' 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한다.

【해설】 ② [X] 'challenge gov' 프로그램은 연방부처 및 기관들이 정책현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솔루션 공모안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 솔루션을 수렴하여 심사한 뒤, 선정된 아이디어에 일정 금액을 포상하는 등 시민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 올바른 지문

② 미국의 'challenge gov' 프로그램은 국민을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프로슈머 협력자로 여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28~732 ▶ ②

| 개념 |

14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① [X] 신공공관리론은 처방하는 유인기제의 획일성이 문제이다. 개인차나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과급이라는 외재적 보상을 주된 유인기제로 삼기 때문이다.

▶ 올바른 지문

① 유인기제의 획일성 문제로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56



| 개념 |

1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설】 ①, ② [O], ③ [X]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이란 상호 신뢰, 호혜주의, 친사회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적극적 참여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④ [O] 후쿠야마(F. Fukuyama)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데서 생기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7~79



| 법령 문제 + 말 바꾸기 |

16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 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해설】 ① [X]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X]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국무총리×)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X] 중앙관서의 장은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18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규제	③ 산출규제

- | | | | |
|---|-----|-----|-----|
| | ㉠ | ㉡ | ㉢ |
| ① | a-① | b-② | c-③ |
| ② | a-② | c-① | b-③ |
| ③ | b-③ | c-② | a-① |
| ④ | b-② | a-③ | c-① |

【해설】 ④ [O] ㉠ 수단규제(투입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②)으로 사례로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규제(㉡) 등이 있다.

㉡ 성과규제(산출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③)으로 사례로는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등이 있다.

㉢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①)으로 사례로는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규제(㉢) 등이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1

▶ ④

| 내용 분류 |

19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

소비의 배제성 \ 소비의 경합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 보기 2 〉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① [O]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것(가)은 시장재(㉤)로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가 해당된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것(나)은 요금재(㉦)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가 해당된다.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것(다)은 공유재(㉠)로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가 해당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것(라)은 공공재(㉢)로 소방, 치안, 국방, 공기(㉥)가 해당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1~43



| 말 바꾸기 + 개념 |

20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의미한다.
-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해설】 ③ [O]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X)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 올바른 지문

- ③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54~757

